

# “중기중앙회장 선거, 선관위에 의무위탁”... 공정성 ↑

국회입법조사처, 이슈제기 나서  
농협·수협·산림조합은 ‘의무위탁’  
‘임의위탁’ 위탁선거법 적용 한계  
중기중앙회 “새 제도 개선 준비중”



서울 여의도에 있는 중소기업중앙회.

21대 국회가 본격 출범한 가운데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선거 관리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의무적’으로 위탁해 공정성을 더욱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국회에서 먼저 나왔다.

우리나라의 중소기업 숫자가 630만 개(2017년 조사 기준)를 훌쩍 넘어 전체 기업의 99.9%로 절대다수일 정도로 중소기업이 한국 경제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업계의 ‘말형’인 중기중앙회장 선거 역시 이에 걸맞는 법적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앞선 20대 국회에서도 중기중앙회장 선거와 관련해 기존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임의위탁’이 아닌 ‘의무위탁’을 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중기조합법)과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탁선거법)이 발의됐다. 하지만 이들 법안은 해당 국회 임기가 지난 5월 말로 끝나면서 자동 폐기됐다.

그런데 의원들의 입법활동과 관련해 아이디어 제공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국회입법조사처가 21대 국회 초반부터 이같은 문제를 제기하고 나서 중기중앙회장 선거 제도가 향후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관심이 쏠린다.

농협중앙회장, 수협중앙회장, 산림조합중앙회장 선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이미 의무위탁하고 있다.

7일 중소기업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중소기업중앙회장 선거제도 현황과 개선과제’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농협중앙회장, 수협중앙회장 선거처럼 중기중앙회장 선거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의무적으로 위탁하도록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현행 중기조합법은 ‘회장 선출에 대한 선거 관리를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이 내용은 2006년 4월 당시 중기조합법에 새로 담겼다. 중기중앙회는 이후 추대로 회장이 선출된 2011년(24대)을 제외하고는 2015년(25대)과 2019년(26대)에 치러진 선거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했다.

하지만 입법조사처는 중기중앙회가 ‘위탁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중앙선

(의무위탁선거 vs 임의위탁선거 별칭)

의무위탁선거
◆위탁선거법제10장(벌칙) 적용
◆3년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
·금품, 향응, 공사(公私)의 직 제공시(58조)
·기부행위 위반한 자(58조)
·당선 목적의 허위사실 공표(61조)
·선거인명부를 거짓으로 작성(63조)
◆5년이하 징역 5백~5천만원 벌금
·낙선 목적으로 허위사실 공표 (61조)
◆2년이하 징역 2천만원 이하 벌금
·후보자 비방죄(62조)
·선거운동의 방법 등 위반자(66조)
◆1년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
·선거인명부 거짓 사위 등재(63조)
·신분 위조 등 부정 투표자(64조)
◆1년~7년 징역 1천~7천만원 이하 벌금
·폭행, 협박, 유인등 불법 체포
◆감금자(65조)
·폭행, 협박 등 선관위 소요·교란자 (65조)
·선거인명부, 관리사무 은닉·파손·훼손자 (65조)

임의위탁선거
◆2년이하 징역 2천만원이하 벌금
·금품, 향응, 공사(公私)의 직 제공시 (137조1항)
◆1년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
·호별방문, 거짓사실 공표, 후보자 비방 및 선거운동방법 위반시 (137조2항)
◆1년~7년 징역 1천~7천만원 이하 벌금 (위탁선거법제65조 적용)
·폭행, 협박, 유인등 불법 체포·감금자
·폭행, 협박 등 선관위 소요·교란자
·선거인명부, 관리사무 은닉·파손·훼손자

\* 공소시효 : 선거일로부터 6개월

관위에 선거 관리를 위탁하고 있지만 ‘의무위탁’이 아닌 ‘임의위탁’이어서 위탁선거법을 고스란히 적용하기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입법조사처는 ‘위탁선거법의 적용

범위에 임의위탁선거도 포함돼 있지만 이 법의 모든 규정이 임의위탁선거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면서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금지(제31조) ▲기부행위의 정의(제32조)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행위(제33조) ▲기부행위 제한기간(제34조) ▲기부행위 제한(제35조) ▲선거일 후 답례 금지(제37조) ▲호별방문 금지(제38조) 등을 예로 들었다.

또 선거사무관계자나 시설 등에 대한 폭행 또는 교란 행위에 대한 벌칙, 위탁선거 위반행위 조사를 위한 장소 출입 방해 행위나 자료 미제출 등 위탁선거법의 벌칙조항도 적용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위탁선거법의 강력한 조항은 ‘의무위탁’을 하는 농협중앙회장이나 수협중앙회장 등의 선거에만 적용할 수 있을 뿐 ‘임의위탁’하는 중기중앙회장 선거와는 다소 거리가 있다는 것이다.

입법조사처는 중기중앙회장 선거시 위탁선거법 대신 적용할 수 밖에 없는 현행 중기조합법의 선거운동 제한 행위와 이에 대한 벌칙 규정이 덜 엄격하다는 점도 문제로 꼽았다.

중기조합법의 경우 임직원이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하거나 선거운동 기획에 참여하는 행위, 그리고 선거권자의 지지도를 조사하거나 발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은 것이 한 예다.

지난해 중기중앙회장 선거 당시(1~2월)에도 단체 카톡방에 허위사실 유포, 특정후보지지 등의 위반사례가 총

3회 신고됐지만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선 ‘경고’로 각각 끝난 바 있다.

또 ‘매수 및 이해유도죄’에 대한 벌칙의 경우 위탁선거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을, 중기조합법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각각 규정하고 있는 등 중기조합법이 위탁선거법보다 한계가 분명하다는 설명이다.

일부에선 관련법 개정을 통해 중기중앙회장뿐 아니라 중기중앙회내 전국조합·연합회의 장을 선출하는 선거에도 똑같이 적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주무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와 당사자인 중기중앙회는 지난 20대 국회 당시 관련 개정안이 발의됐을 때 내놓은 의견을 통해 소규모 조합의 경우 선거 위탁에 따른 비용 부담 증가, ‘추대’가 대부분인 현실에서 법 개정시 ‘선거’가 강제될 가능성, 조합 운영의 자치권 훼손, 중기조합법내 선거 관련 조문 유명무실화 등을 우려사항으로 꼽았다.

중기중앙회 고위관계자는 “제도 개선 취지엔 충분히 공감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11월 법률전문가, 업종별 대표, 지역 대표 등이 두루 참여한 선거제도개선위원회를 꾸려 지금까지 두 차례 회의를 개최했다”면서 “이후 추가 의견 수렴과 공청회 개최 등을 거쳐 개선안을 마련하고 법 개정 작업을 끝내면 다음 27대 회장 선거(2023년)엔 새로운 제도를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 AI·데이터 기업, 시장선점 경쟁 막 올랐다

아크릴·솔트룩스·마인즈랩 등  
생태계 기반마련 비즈니스 강화

인공지능(AI)·데이터 기업들이 시장 주도권을 잡기 위한 플랫폼 시장 경쟁에 나서고 있다.

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아크릴·솔트룩스·마인즈랩 등 AI 기업들과 에이모 등 데이터 가공기업들은 자사 플랫폼을 통해 AI 서비스를 설계하거나 AI를 위한 데이터를 가공할 수 있는 플랫폼 비즈니스를 강화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 업계 대표는 “AI와 데이터 시장은 아직 생태계가 형성되지 않은 만큼 플랫폼 사업을 전개해 많은 고객사를 확보하면 시장에서 선두업체로 올라설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크릴은 최근 서비스 기획부터 데이터 가공, 고객 서비스와 연동할 수 있는 차세대 AI 플랫폼 ‘조나단’을 선보이고 고객 확대에 나서고 있다.

아크릴 관계자는 “회사 내부에 전문적인 AI 개발 조직이 없는 경우도 많은데, 이들 기업에 인공지능을 쉽게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는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지원할 것”이라며 “조나단은 감성 지능을 강점으로 언어 지능, 시청각 지능 등을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



에이모가 자율주행 분야에서 AI 학습용 데이터를 가공한 사례.

/에이모

아크릴은 조나단을 AIA생명, 라이나생명, 롯데손해보험, KB손해보험 등 보험회사에 공급한 데 이어, 서울대병원, 베스타안병원과도 협력해 의료 AI 플랫폼을 개발 중으로 AI 의료 사업으로 확대하고 있다.

마인즈랩은 4월 말 기준 음성, 시각, 언어 등 30여 최신 딥러닝 AI 플랫폼을 사용할 수 있는 구독형 AI 서비스 ‘마음AI’의 월간 구독자 수(MAU)가 1000개를 돌파했다고 밝혔다.

마음AI 플랫폼에서는 클라우드 기반 회의록 자동정리 서비스뿐 아니라 음성정제, 화자인증, 음성분리 등 음성 엔진 5종과 인물 포즈 인식·이상 행동 감지 등 시각 엔진 9종, AI 작문·기계 독해(MRC), 설명 가능한 텍스트 분류

기(XDC) 등 자연어 처리 엔진 6종 등을 서비스하고 있다.

또 정기구독 고객에게 AI 전문가 컨설팅, 커스터마이징 학습, 아카데미 교육, 기술지원 등 패키지 형태로 AI 서비스를 제공해 직접 AI를 개발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을 지원하고 있다. 또 오는 24일 ‘마음AI 세미나’를 개최해 플랫폼 비즈니스의 파트너사들을 초대해 클라우드 데이터 제작 툴 등 신 기술을 소개할 계획이다.

솔트룩스는 기존에 소프트웨어 서버에 직접 설치해 쓰는 방식인 온프레미스(On-Premise) 사업 중심에서 벗어나 최근 클라우드 기반 플랫폼 사업으로 확대하면서 플랫폼 비즈니스를 강화하고 있다. /채윤정 AI전문기자 echo@

### 새로 나온 책

## 규범으로 여겨지는 ‘백인성’ 비판

코로나19 방역에 실패한 유럽과 북미에서 아시아인들에 대한 신체적, 언어적 폭력이 공공연하게 일어나고 있다. 분풀이 상대를 찾지 못한 사람들은 피부색이 다른 약자에 집단 린치를 가했다.

피부색은 인종을 구별하는 즉각적이고 강력한 수단으로 작용한다. 한국도 인종주의나 피부색주의(Colorism)로부터 자유롭지 않다. 우리의 시선 속에서는 또 다른 백인성이 작동한다.

국내 체류 외국인 수는 230만명을 넘어섰지만 우리 사회가 동남아시아와 아프리카 등지에서 온 어두운 피부색의 외국인에게 우호적이지 않다는 것은 다문화 수용 지수와 같은 지표를 들이대지 않아도 사회적 분위기로 충분히 감지할 수 있다.

인종의 위계, 피부색의 스펙트럼은 상대적이기에 우리 사회는 늘 율타리와 사다리를 세움으로써 정상성을 확



화이트

리처드 다이어 지음/박소정 옮김/컬처북

인반고자 한다.

책은 지구적 질서에서 규범으로 여겨지는 백인성을 비판하며 ‘화이트(White)’가 내포하는 두터운 의미의 지층과 백인성을 기준으로 만들어진 서구 문화의 무수한 면면을 낱알이 까발린다. 저자는 백인성이 서구 문화에서 특권적 위치를 형성해 온 문화적 구성물이라고 분석한다.

430쪽, 2만8000원. /김현정 기자 hik1@

### 팬데믹과 문명



김명자 지음/까지(까지출판)

초연결 세상에서 팬데믹 공포는 전 세계를 공황상태에 빠뜨렸다. 코로나19와의 전쟁에서 우리는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까. 책은 문명사 속에서 고대로부터 천연두, 페스트, 콜레라, 스페인 독감, 에이즈와 같은 감염병이 시대와 지역을 불문하고 경제, 사회, 정치, 문화 등 모든 분야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보고 팬데믹 사태를 헤쳐나갈 근본적인 해법을 알려준다. 402쪽, 2만2000원. /김현정 기자